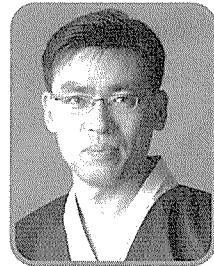


도서관은 고서박물관(?)



임성은*

도서관에 불거리도 많아지고, 놀거리도 많아졌다. 품 나는 표현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문화센터' 쯤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빼곡한 책장 사이로 약간은 매쾌한 냄새가 풍기는 고서(古書)들이 즐비한 책장이나, 고시나 각종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공부방, 이들이 가끔 머리를 식히는 용도의 신문, 잡지 비치 공간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의 도서관은 공간의 활용이나 배치 측면에서 물리적인 이미지 변신에는 성공했으나, 잠정 이용자들의 의식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필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통해, 도서관의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홍보비가 부족하면 홍보비를 증액하되 홍보라는 것이 꼭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서관 조직상 홍보업무 전담자를 1명이라도 보유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홍보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주무부처 장관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으니, 그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편이다.

마케팅이나 홍보 강화를 통한 도서관의 변화추구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이 추구한 구체적인 사례와, 예산심사 측면에서 도서관 분야에 대한 평소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변화가 가져온 대박(?), 국회 의원열람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국회도서관에 의원전용 열람실까지 마련됐으나, 국회의원은 없고 학위논문을 찾으러 오는 학생들로 늘 붐볐다. 설립목적이 전도돼 버리는 모순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의원회관 1층에 의원열람실을 추가로 만들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 국회도서관은 의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과 500여m 떨어져 있었는데, 접근성을 개선

* 국회 예결특위 강길부 의원 보좌관, ych16@assembly.go.kr

한 것이다. ▲ 열람실 안에 회의공간도 마련했는데 이곳에는 프로젝트를 비롯, 각종 기자재를 갖추어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또 다른 코너에는 의원 사무실에 구비되지 않은 ▲ 컬러프린터와 컬러 스캐너, 비디오편집기가 갖추어졌다.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디지털 녹화분을 전자파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인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예약을 하고 줄을 서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도서대출 업무의 경우, 도서관 직원이 정례적으로 오가며 신청한 도서를 배달하는 'One-Stop Service' 도 도입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 입법전자정보실에서 박사 출신의 연구관 20여명이 전문분야별로 자료수집 및 의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은 없다'는 지탄을 받던 국회도서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Product와 Place의 차별화가 원동력

마케팅 이론적 측면에서 국회도서관의 변화를 분석해 보자면, 우선 상품(Product)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서대출 등에 국한하지 않고 다변화했고, 이 방향이 시대흐름과 맞았으며, 수요자의 요구와도 들어맞았다는 점이다.

공간(Place)의 배치 측면에서도 국회도서관의 전략은 훌륭했다. 비록 전용면적 18평의,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공간으로 꾸며놓은 셈이다. 특히 지역 분관 혹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서가 확보를 하지 않고도 전산화된 도서목록을 이용한 도서 대출과 배달 시스템을 통해 훌륭한 서비스가 되리라 기대된다.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읍·면·동 사무소에 마을문고가 많이 생겨났으나, 관리 수준이나 이용률, 기대수준은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반면 지역의 공립도서관과의 연계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소관 부처의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의 비능률성 때문일 것이다. 즉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가, 동사무소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공공도서관의 상당수의 관리는 교육청 즉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는 측면에서 통합과 조정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부처가 'red tape' 을 조금만 끄집어낸다면 국회도서관 못지않은 'One-Stop Service'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산확보전쟁.... 그 현장의 도서관

연말,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국회 주변은 이수라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과 국회 직원은 물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자기 소관 예산을 정부안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려는 공세적인 공무원과, 행여나 자기 예산이 깎이거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노심초사하는 수세적 공무원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다.

Fund-Raising 측면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매우 안정적이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그 현장에서 도서관 관계자는 별로 만난 기억이 없다. 물론, 도서관 예산이 소액이고,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필자가 만나지 못한 이유도 있겠으나, 도서관 예산의 증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거나 질의를 하는 경우도 목도하지 못했다. 다수의 관심사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다른 기관의 노력은 매우 치열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나 더 증액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결위원 사무실을 찾아다닌다. 때로는 밥도 사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전 부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예결위원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는 '차려주는 밥상'에 비유할 만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산확보 전략의 변화를 요청한다면,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 외 기부 문화를 적극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다. 각 가정에서는 늘어나는 서고 때문에 고심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늘 보는 책은 아니지만, 막상 버리려면 아깝고, 보관을 하고 있으려니 책장도 사야하고, 사후 관리에 공도 들여야 한다. 이사라도 할라치면 또 한번 대대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도서관에 기증을 하려하면 그다지 반가운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기증 담당자는 대부분 과다한 업무에 한직이라는 훈장(?)을 가지고 있는 듯 해 보인다. 제도적으로 개인문고를 마련해 주면 명예도 생기고, 자기가 필요해서 다시 찾을 때 느낌도 다를 것 같으나 1,000권이하의 도서는 개인문고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요즘 도서관은 전산화가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어서, 주제별 분류기호로 정렬이 안 돼 있더라도 도서위치를 찾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은 신규 구매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다량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고, 도서구매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서적을 구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나오며

도서관이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곳이라는 개념은 탈피하고 있다. 상품이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대로 이용자, 특히 잠재적 이용자의 인식은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격이 강하다. 새로운 이미지의 각인을 위해서는 이용자를 통한 구전 효과도 있겠으나 공세적인 PR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언론홍보 활동도 좋겠고, 인기 드라마의 촬영 배경으로 제공하는 것도 대중적 인지도를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친근한 도서관, 생활 속의 도서관 정착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기대된다. 